

지방소비·소득세 신설...광주·전남 상대적 불이익

부익부 빈익빈... 지역격차 확 커질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되지만 타 지역에 비해 민간소비 지수와 재정 자립도가 낮고 경제 규모가 작은 광주·전남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는 가중치를 더 두거나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해 신설하는 관련 제도가 지방자치 발전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또다른 불균형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실질적 효과 미지수=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라는 전망이다.

우선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지난 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으

감세 따른 지방재정 손실 막기 역부족 지역별 세율 차등 적용 등 보완책 필요

로 인해 지방재정 손실(교육교부금 포함) 규모는 2012년까지 최소한 2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내년부터 2조3천억원이 지방 재정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2012년까지는 7조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정부가 본권교부세 운영기한을 5년 연장하고 매년 3천억원 규모의 지역상생발전 기금을 조성해 지원한다고 하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는 현재 소득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서 지방 재정 확충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

◇'부익부 빈익빈' 심화=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 도입

으로 지역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우려된다.

민간회계소비세 지수를 바탕으로 일률적으로 수도권 100%, 광역시 200%, 도 300%의 가중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자립도 및 소비 지수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방소비세 도입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실제로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광주는 내년 749억원의 세입이 증가하는 반면, 부산과 대구는 각각 1천928억원, 1천311억원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남도는 내년 1천252억원의 추가 세입이 예상되나 경북과 경남은 각각 1천978억원, 2천387억원으로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예측은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하려는 지방소비세가 지역경제 능력 차이에 따라 새로운 지역격차를 불

러울 수 있다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의 보완책 절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즉, 지방소비세 가중치를 현재의 300%에서 500%로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경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수도권의 가중치를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지역 낙후도와 인구 및 면적 등에 가중치를 더 주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강운태(광주 남) 의원은 "지방소비세 도입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의 공백을 막기에는 역부족인데다 비수도권 지역 간의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 차원에서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미술전문지 '눈' 창간

2천부 발간 전 세계 박물관·미술관 등 배포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이 현대 미술의 담론을 이끌어 갈 국제 현대미술 전문지 '눈(noon·사진)'을 발간했다. 비엔날레 재단이 미술전문지를 발간하는 것은 세계에서 광주비엔날레가 처음이다.

이번 창간호는 재단의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실(실장 김은영)이 1년여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이뤄낸 첫 성과물로, 광주비엔날레가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도약하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미술전문지 발간은 창설 15년을 맞는 광주비엔날레가 그동안 축적한 인적 네트워크와 학술 정보를 구축하고, 학예 연구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계간지인 '눈(noon)'은 국·영문 같은 쓴 걸러판으로 모두 2천부가 발행됐다. 전 세계 비엔날레와 미술관, 박물관,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일반 서점에서 판매된다.

재호인 '눈'은 인간의 눈과 전성기, 절정, 최고점을 뜻하는 영문 'noon'을 뜻한다. 인간의 눈을 통해 현대미술과 문화에 대한 담론을 끌어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

편집위원에는 재단 이용우 상임부이사장과, 이화여대 김우창 석좌교수, 김현도 전 재단 전시부장, 전남대 윤순중 사회학과 교수, 전북대 심해련 과학학과



교수, 도서출판 북노마드 윤동희 대표, 컬럼비아대학 실베르 로프랑제 명예교수, 케임브리지대학 크리스티안 모그너 교수 등이 참여했다. 창간호는 시각 이미지의 과잉과 폭력성을 집중조명한 '스펙터클의 폭력'(The Violence of Spectacle)을 특집으로 다뤘다.

기호학의 대가인 실베르 로프랑제 교수가 '스펙터클의 소비'를 실었고, 제1회 아테네 비엔날레 마리케 반 할 감독은 '비엔날레의 논쟁-세계화와 비엔날레화'를 게재했다.

또 요코하마국립대 교육인간과학부 하사시 무모이 교수가 '미디어 스펙터클', 계원디자인예술대 서동진 교수가 '포스트-스펙터클 시대의 미술의 문화적 논리'를 각각 실었다. 김은영 실장은 "세계 미술의 흐름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록기자 kroh@kwangju.co.kr



내년 10월 영암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무대인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의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경기장 주 관람석인 그랜드 스탠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F1 대회 국가 지원 국제행사 격상 경주장 건설 등 국비 확보 쉬워져

■ F1 지원법 국회 통과 의미와 과제

포뮬러원(F1) 지원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F1 대회 준비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F1대회 지원법 제정으로 인해 무엇보다도 코리아 F1 대회 국가가 지원하는 국제행사로 격상됨으로써 향후 범 국민적 불 조성과 함께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브랜드 제고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숙박·교통시설 마련과 경주장 사후활용 방안, 배후단지 조성 사업 등은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로 대두됐다.

◇지원법 제정 의미=F1 대회 지원법 제정의 가장 큰 의미는 정부의 대회시설 사업(예산)·조직 지원 등의 근거 마련과 함께 대회조직위원회 구성을 통한 F1대회의 체계적 준비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이다. 특히 법 제정으로 인해 F1 대회가 국가가 지원하는 국제행사로 인정받은 것도 큰 성과 중 하나다.

앞으로 국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는 'F1대회조직위'가 설립돼 체계적인 대회 준비가 가능하게 됐고, 지역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으로 F1대회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회 시설 및 관련 SOC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가 구체화돼 경주장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 1천980억 원 중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중인 880억 원의 국비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현재 우선 사용 승낙을 받아 공사가 진행중인 F1 경주장의 경우 매립공사 준공 인가 이전이라도 간척지 양도·양수가 가능해내다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특례 등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국·공유 재산대부, 채권 등 매입의무 면제, 체

육진흥투표권 발행, 기념주화·기념우표 판매, 공무원 파견 요청 등 대회 개최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종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남은 과제=프로젝트 파이낸싱(PF) 성공과 지방채 발행을 통한 도비 확보, 지원법 제정으로 인해 대회 개최를 위한 기반은 마련됐다. 그러나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하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아직까지 생소하게 여기고 있는 F1 대회에 대한 홍보가 성공개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이긴 하지만 대대적인 붐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다. 따라서 전 국민적인 불 조성이 시급하다.

또한, 3일간 열리는 대회기간 동안 관람객 수가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기에 걸 맞는 숙박과 교통시설 등은 너무나 열악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과 경기장 인근 도로 확장, KTX 연계 등 공항, 환만, 철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체계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년에 고작 3일밖에 경기가 열리지 않는 대회 특성상 F1 경기장에 대한 대회 사후활용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여기에 F1경주장 주변을 배후단지로 조성해 상주인구 1만여 명 규모의 소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분량과 실제 조성사업이 기대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상면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앞으로 남은 과제가 산적하지만, 숙박·교통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하나둘씩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남도민들의 변함없는 성원으로 지원법 제정 등 큰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도민들의 도움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